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 281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0. 6. 26(금) 15:00 ~ 19:15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 회의실
- 출석위원 : 박종관 위 원 장
강윤주 위 원
박경주 위 원
유은선 위 원
이시백 위 원
이원재 위 원
이진희 위 원
이희경 위 원
전고필 위 원
정유란 위 원
조기숙 위 원
홍태림 위 원

1. 성 원 보 고

○박종관 위원장

- 오늘은 7기 위원님들을 모시고 두 번째 정례 회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6월 정례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3개의 의결안건과 4개의 보고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정 안건을 처리한 후에 소위원회 및 TF구성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고 급한 논의가 있으면 추가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성원 여부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위원 12인 중에서 현재 이원재 위원님이 조금 늦게 참석할 예정이며, 현재는 11인의 위원이 참석해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2. 개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1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께서는 전차(前借)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278차부터 280차 회의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5월 나주에서 개최된 278차 회의에서는 9개의 의결안건 중에서 1개의 안건을 유보했고 나머지 8건은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개최된 279차와 280차 회의에 상정된 3개 안건은 모두 원안 의결이 되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사무처장으로부터 전차(前次) 회의의 결과를 보고 받으셨는데요.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첫 번째 의결안은 2020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연극·창작뮤지컬 대본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이 건은 양한성 공연창작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2020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연극·창작뮤지컬 분야 대본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작년 하반기 정시공모를 공고할 때 일괄적으로 공고하지 않고 공모 시기만 별도 공모 형태로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접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연극분야 총 173건, 창작뮤지컬 64건으로 총 23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예심과 본심에 거친 심의 끝에 최종 본심에서는 연극 26건, 창작뮤지컬 8건으로 총 3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전차(前次) 위원회 때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올해의 신작 쇼케이스 심의의 잔여예산이 많이 발생해서 3억 9,070만 원을 2개 분야에 걸쳐서 배분을 했습니다. 지원신청 T/O 등을 감안해서 연극분야에 2억 9,070만 원, 뮤지컬에 1억을 배분해서 총 예산은 모두 소진해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2월부터 3월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1차 예심(재택심의)을 한 달 반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6월 중에 순차적으로 본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예심에서 우수작 후보를 추천 받았습니다. 연극분야 25편 그리고 뮤지컬 50편 등 복수추천을 감안해서 건수는 소폭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3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심의위원 후보단에 등재된 것에서 사무처 2배수, 위원 2배수로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정리해서 7월 1일 경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지원심의 결과는 10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안건번호 826호 2020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연극·창작뮤지컬 대본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림 위원

- 창작뮤지컬 쪽 심의위원 중에서 비수도권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 뮤지컬은 지역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그것은 아니고요. 늘 반복되는 한계점인데요. 풀 안에 등재된 분이 5인이 안 됩니다. 저희가 추천에 들어가 있어도 섭외 과정에서 일정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지역은 고려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후보단 풀이 많이 채워지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홍태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홍태림 위원이 질문하신 대로 연극분야 선정결과를 보면 서울·경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이 부분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대본공모는 지역뿐만 아니라 무기명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철저히 작품성 중심으로 심사를 했고 지역은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작품의 수월성 심사를 하니까요. 특히 블라인드 심사로 하기 때문에 지역할당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심사위원들도 누가 신청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본인을 밝히신 분은 결격으로 하는데 일부 실수를 한 작가들도 있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설명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하는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두 번째 의결안건은 2020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자부담 한시적 완화 적용 추진계획(안)입니다.
이 건은 조미숙 공정심의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미숙 공정심의부장

-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자부담 한시적 완화 적용 추진계획(안)입니다.
25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조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하반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진행 경과입니다.
2019년 9월 23일 257차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사항인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추진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사업 중 자부담 적용 제외 대상기준을 마련하여 개인지원, 비평, 연구, 청년지원 사업과 기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등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자부담 의무비율이 적용되는 2020년도 공모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별 10%를 일괄 완화 추진하고자 하며, 자부담 적용 완화 대상 사업은 15건으로 표 안의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의 경우 추정 예산 사업 추진 시 기재부와 협의하여 비율을 20%에서 10%로 하향 변경하였으며, 그 중에서 중장기창작지원 사업의 경우 단체의 재정안정성 확보 노력 여부가 평가항목이므로 자부담 여부를 평가합니다.
자부담 완화 시행 시기는 전체회의 의결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급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미 완료된 사업은 제외 적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안전번호 제 827호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자부담 한시적 완화 적용 추진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본 안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기재부와 협의를 했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우선 문학시각본부장의 설명을 짧게 듣고 사무처장의 의견을 추가로 받겠습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저희들이 자부담 완화 추진을 위해서 기재부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기재부는 문화예술 쪽만 자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좀..... 기재부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다른 곳도 자부담을 완화해 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기준의 문제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해 주겠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협의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동안 10% 이상을 하는 게 암묵적인 합의점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자부담을 완화했을 때 내년도 예산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자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이 추가 설명을 하는 동안 이원재 위원님께서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저를 포함한 위원님 모두 참석을 해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이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해 주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오영주 본부장이 설명을 한 대로인데요. 사실 자부담을 부담하기가 어려운 지원사업들이 있어서 자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부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기재부는 상당히 완강합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말하자면 내년도 예산현황 책정에 대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라서요. 오늘 위원회에 이 안전을 상정한 것은 위원회 의견을 묻고 예술계 현장의 의견을 조금 더 보완해서 기재부를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고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림 위원

- 혹시 자부담 관련해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완화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받게 될 수 있는 불이익이 어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자부담 한시적 완화를 했을 때, 물론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반 데이터가 있습니까?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일단 기재부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자부담 완화를 추진하게 되면 현재 예산 100%에서 90%는 기금이고 10%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을 완화하면 결국 90%의 예산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부에서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결국 현재 예산에서 10%를 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서 대비 10% 정도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부와 협의 없이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전고필 위원

- 자부담을 주로 쓰는 분야는 어느 부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시설임대료입니까? 그 부분을 봐야 여기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특정한 것으로 제한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 예산중에서 10%는 이렇게 쓰겠다고 신청을 하면 자부담으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강윤주 위원

- 홍태림 위원님이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기억에 자부담에 대해서 이미 많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자부담이 필요하냐?”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논의를 기왕에 할 거면 조금 더 크게 보고 예술행사지원에 “자부담이 필요한가를 논의하며 그 결과를 포함해서 기재부와 얘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술지원에서 자부담을 부가하는 이유는, 사실 작년에 20%로 낮아진 것이죠. 그런데 단체들이 지원이 없더라도 지속가능할 수도 있도록 하는 노력이 증가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자부담을 부담함으로써 단체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느냐는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공모할 때 개인 성격의 사업이라든지 국가정책에 관한 사업들의 자부담을 일시 0%로 낮췄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추진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홍태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통계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서 한시적인 완화를 한번 해 보고 그 결과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무부서인 문화부만 해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진행해도 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는데요. 문화부도 기재부를 설득해야

하는데요. 기재부는 통상적으로 보조금이 국가적으로 많이 나가다보니까 문화예술에 한해서 특정 자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자부담이라는 것은 지원 받은 단체들의 자립을 분명하게 보여 주거나 활성화 시키는 지에 대한 데이터가 근거가 돼서 기재부와 얘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관 위원장

- 생존이나 지속가능성이나 자생성 확장을 위해서 자부담을 부담시켰는데요. 자부담을 없애자는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회 안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업에 따라서는 적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특별하게 구휼적 성격의 사업들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잡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할 만큼 예술현장이 붕괴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트랙으로 되고 있는 지방비, 통상 광역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의 경우 혹은 직접 지원비인 경우에는 자부담을 안 하는 곳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것과 비교할 때 예산의 일관성에 차이가 있으니까요. 올해 특별히 어려우니까 자부담 조치를 완화해 달라는 것을 현장의 의견으로 의결해 주시면 그 의결을 바탕으로 문체부, 기재부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여 붕괴직전에 있는 현장이 부양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삼겠다는 것이 이 안의 의결을 주문하는 핵심입니다.

○강윤주 위원

- 예, 저는 그 의결안에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자부담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자는 것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강윤주 위원님 말씀대로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예술계 내에서는 자부담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기재부나 성과를 측정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국가보조금이라는 것은 보조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로 설득할 수 있느냐? 이런 요구를 해 보고 그 과정에서 올해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기반을 가지고 가려는 것입니다.

○이진희 위원

-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기재부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10%에서 0%로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완화하거나 다른 협상 카드를 고려하고 계십니까? 왜냐 국가인권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에서 자부담 비율을 5%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정안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예, 처음에 저희들이 기재부에 가서 0%로 했다가 완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꼭 0%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10% 밑으로 완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0%가 안 되었을 때 최소한 10%보다 낮게 할 수 있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진희 위원

- 그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다른 국가지원사업에서 비율이 낮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유은선 위원

- 자부담이라는 것은 실제로 현장에서 하다보면 기획자의 몫으로 떨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빙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은, 만약 0%가 아니라면 그것이 가능한가요?

○조미숙 공정심의부장

- 자부담까지 총사업비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말씀하신 것은 90%만 전달을 하면 안 되냐?

○유은선 위원

- 예, 자부담을 정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박종관 위원장

- 이전에 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자부담을 매칭 하던 시절에 원래 지원 받은 예산만 정산 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랬다가 지금은 비율을 정하고 그것을 총사업비로 이야기하고 정산을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e나라도움이 도입되면서 자부담부터 쓰라는 것이 정책이었습니다. 현재 자부담까지도 총사업비로 해서 자부담까지 정산을 받아야 e나라 도움에 정산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은선 위원

- 제가 알기로 신나는예술여행은 자부담이 없는 것 아닌가요?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자부담이 없는 부분들은 작년에 회의를 통해서 일부 조정을 하여 개인지원이나 비평, 연구, 향유성 사업 같은 경우 자부담을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27쪽을 보시면 작년도 현황이 있습니다.

○김선출 감사

- 대상사업 전체를 망라해서 표를 만들어 놓았네요. 356억.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현재 자부담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선출 감사

- 그러니까 10%를 완화하면 35억이 자부담으로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전부 다 현금 자부담인가요?

○전효관 사무처장

- 현물이나 인건비를 예산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니까 예산입니다.

○유은선 위원

- 제가 볼 때 내년에도 공연계는 올해보다 어렵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아예 자부담을 뺄 수 있도록 하는 게,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기재부와 얘기를 하지만 보조금 자체를 안 주면 할 수가 없는 단체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나중에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3년 전에 기재부에서 자부담을 30%까지 높이겠다고 했는데요. 그때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30% 못하고 예전대로 10%정도 하는 것으로 간신히 설득을 했습니다.

○유은선 위원

- 조금 더 현실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최소한 5%라도 줄이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유은선 위원님 말씀대로 10%를 점진적으로 낮춰서 자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국고사업과 관련한 것도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례가 지역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우량한 사례가 있으면 중앙정부에서도 얼마든지 바꾸고 개선한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지역문예진흥기금도 자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대한 문체부를 설득하고 기재부와 협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예술계의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기금에서 가져가는 비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누구나 알면서 기금을 가져가서 공연을 하고 전시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특히 공연하는 단체들이 어려운 것은 티켓을 판다고 하더라도 그 티켓을 모두 팔 가능성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수익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수익을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가져가야 하는데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작은 공연 단체들은 마케팅이나 홍보비를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에 가다가 비어 있는 광고판을 보거나 공연방송의 중간에 나오는 광고 등..... 저희한테 기금을 받아서 가서 운영하는 공연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서 그 분들에게 “자립해라.”하지 말고 그런 대중에게 알려질 수 있는 루트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논의를 종결하고 안건을 의결할까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의결하려고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안건번호 828호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연예술관람료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결과 및 사업추진계획(안)입니다.
이 건은 이종국 공연기반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먼저 당초 의결안건으로 지난 5월 29일 위원회 회의 때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개선(안)을 의결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장의 의견수렴까지 마쳤지만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현시점까지 자료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로는 의결이 안 되고 진행경과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의자료 30페이지입니다.

5월 29일 그리고 6월 초에 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주셨던 의견을 엄중하게 받아 들였고 문체부와 공동으로 상황을 공유해야 되겠다. 정부에서 발표했다고 해서 분명히 문

제가 있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무작정 진행할 수 없겠다는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 세종시 문체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현장에서 여론이 형성되어서 보완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전달했고 그 사이에 옥신각신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의 의견수렴은 저희가 6월 2일과 3일에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공연분야 위원님들과 밤늦게까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 총 8차례의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주요의견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가장 현실적으로 지원금액이 발표되었지만 상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전통예술분야나 미용분야에 있어서는 장르를 할당하는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메르스 사태 때 진행되었던 1+1 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화되었을 때 정책 변경이 있어야 된다. 당초 이 사업이 설계된 것은 하반기에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설계가 되었던 사업인데요. 하반기에 접어드는 시점에도 전혀 개선될 상황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문제가 터지는 국공립 시설들이 전부 다 폐관하는 상황에서 관람을 보러 오라고 하는 엇박자 정책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연장 방역체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연향유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예술 가치를 알리는 홍보캠페인이 같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단순히 관람 할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을 관람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가치를 제고시키는데 자리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부정사용이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예방시스템. 그래서 1+1사업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예술인들이 이런 부정수급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 이 사업을 하는데 특히 현장예술계에 대한 의견을 써냈지만 실제 이 사업들은 관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하듯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뢰도 95%, 허용편차 $\pm 2.93\%p$ 라고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와 별도의 첨부자료가 있는데요.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설문지 보고를 드리면, “현재 공연예술 관람권 할인권 지원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잘 알고 있다.’ 라는 분은 21.4%였는데요. 이미 6월 초부터 시작하고 영화 할인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48.4%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른다.’ 는 답변이 45.8%입니다. 사실 영화나 관광 할인, 관람권 지원 사업 그리고 별도로 보고드릴 전시관람 지원사업이 한꺼번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보다는 그냥 들어봤다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특히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공연 관람료가 일부 지원될 때 “관람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의향이 있다.”는 분이 51.2%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질문으로 관람료 할인율에 따른 공연 관람 의향에서는 앞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신 것처럼 50% 이상 할인이 되어야 관람 의향이 생긴다는 응답이 43.3%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8,000원 정도 수준이면 20% 정도 이하가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일반 국민들도 할인율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 발표(안)으로 8,000원 할인쿠폰 제공 시 공연 관람의향 여부에서는 47.3%로 절반 정도가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호하는 지원방식에서는 5월 말에 보고를 드린 대로 예매사이트에서 쿠폰 발급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 방식에 대해서는 TV광고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현재 오늘이 마침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하는 날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몇 십 억씩 정부가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별로 없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의 홍보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TV광고를 할 범위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공문을 통해 저희에게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어느 정도 수정해서 기본계획이 오면 오늘 의견주신 것들을 문체부와 협의를 통해 보완하고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은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예, 긴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장님 보고 중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의결을 하지 않고 보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견 개진과 토론 등을 이어가겠다는 말씀인데요. 논의가 끝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논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전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경 위원

- 예경에서 아직까지 안 보내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고요. 결국 이것은 기관의 개인판단이 아니라 예술현장을 위한 사업인데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상황입니다.

○ 전효관 사무처장

- 이 과정에서 예경에서 사업추진을 안 하겠다는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문화부와 협의를 통해 기 확정된 안이 있는데 그것을 왜 수정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입니다. 하여간 지금은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류를 안 준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정유란 위원

- “왜 수정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발언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예경에서 문체부와 이미 얘기가 되어 사항인데 왜 수정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요.

○전효관 사무처장

- 그것은 지난번에 사업을 예경에서 추진하지 않겠다는 과정에서요.

○정유란 위원

- 예경에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당초 문체부는 코로나19가 급박하기 때문에 국고로 500억 정도로 생각하고 파트너로 예경을 선정해서 추진해 왔는데요. 그 이후에 기재부에 “기금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미 디자인이 된 상태에서 기금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부터 설계를 500억으로 할 때도 장르별로 커트를 한다는 식으로 준비를 했다가 금액이 줄어서 맞춰서 온 것인데요. 최근에는 디자인을 쪽 해왔던 마지막 버전에 대해서 문체부의 국장님께 보고가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것은 생활방역으로 가게 되면 급박하게 시행할 수 있고 영화 쪽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일단 현재 버전이라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나올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면 문체부와 예경과 협의를 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예경은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일단 문체부에서 아직 새롭게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대로 올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했던 것은 뭐냐?” 라고 할까봐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가지는 상황이었습시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할지말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하는 것으로 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려고 했는데요. 어쨌든 생활방역으로 가면 빨리 해야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예매처와 준비하는 시스템은 제가 볼 때 적어서 1.5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급합니다. 어쨌든 임시나 서면으로라도 계속 만나든지 해서 통과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저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급박한 대안마련과 대응에 대한 것들이 3월 이후로 꾸준히 올라오는데요. 복지재단대표이사, 예술경영센터원장 그리고 제가 한 달에 2~3회 이상씩 만나서 협의를 계속해 나갔고 사실 어제도 논의를 했습니다.

주요한 논의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충분하지 못한 인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할 문제가 있고요. 사무처장이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성격의 경험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전산망을 관리한다거나 하는 잘 익숙해져 있는 업무에 적합한 조직설계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타 기관의 이야기를 제가 재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적절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런 모든 기관의 이해에 비해서 적지 않은 국고를 쓰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제대로 된 제도로 작동하게 하려면 어떤 추가적인 장치, 특히 현장의 의견이 폭 넓게 반영되어야 하는 장치들이 있어야 하고요. 계획되고 설계된 권한의 수정 방향의 폭을 넓혀서 현장에 제대로 된 부양 장치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모든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경 쪽에서 공문이 오면 그때 의결절차를 거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추진체계와 책임 범위를 갖추기 위해서 오늘 의결하지 않고 충분한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 질의나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정유란 위원

- 일단 오늘 예경에서 자료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 저희 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식이 있나요?

○박종관 위원장

- 그쪽이 기관이고 의사결정 절차가 있으니까요. 오늘 공문을 받았으면 의결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의결을 하면서 주문사항을 많이 넣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무르익지 못한 상태가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완성되면 서면의결로 진행해서 현장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본부장 전결로 해서 조속히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저도 그렇게 업무지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로 다른 것에 대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주시고 나면 제가 본부장과 부장한테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본부장 그쪽 담당자와 급히 협의하도록 업무지시를 하겠습니다.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접수를 할까요?

○박경주 위원

- 저희가 이의제기를 했는데 현장수렴을 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달 드리고 싶어요. 사실 쉽지 않은데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더라고요. 처음이니까 예경에서 그러지만 처음에 잘 풀면 다음에는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꼭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급한 보고라서 제가 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4인이 모두 여성 위원님들입니다. 그리고 논의된 내용들이 분명한 것들이었습니다. 무용이나 전통 같은 경우 소외된 장르인데 최소보장제를 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을 비롯해서 현장이 요구하는 분명한 의견들이 나와서 잘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 했습니다.

○이희경 위원

- 음악은 제일 마지막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현장에서 간담회를 거치면서 들었던 생각은 너무 비관적이었습니다. “이 예산을 쓰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저는 그게 가장 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때 논의할 때 “플랜B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예경 쪽에서는 굉장히 당황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예경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있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도 있어서요. 이 사업은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정말 중요한 예산을 털어서 쓰는 것인데 그것을 하는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예견됩니다. 그것이 저희로서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매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문예진흥기금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최종 책임은 위원회가 져야 합니다. 사실 명확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집행이 되든지 누가 하든 최종 책임은 위원회가 져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당연한 지적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고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유란 위원

- 워크숍을 갔을 때 이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요. 33페이지를 보면 관계기관 1차 회의 결과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페이지에 문체부 사무관이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본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예술위 사무처의 몫이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사업 자체를 설계하실 때 의견을 청취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사무처에서 알아서 설득해라.”라고 하셨다는 게 기록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워크숍 때 질문을 많이 드렸던 이유는, 제가 7기 위원으로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의 시점에서 기존 지원사업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적어도 올해 추경으로 잡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원회 안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인가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문체부 사무관의 발언을 보고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고 보조의 사업으로 세부적인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갈 수 있으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정책 부분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처음에 말하자면 국고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디자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감안하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박종관 위원장

- 다만 현장도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500억 정도의 국고로 추진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예산편성지침 등을 저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순간에는 부총리 발표에 의해서 이 사업이 발표가 되었지요. 사업 예산이나 추진방

식은 문예진흥기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위원회 사업을 위원장, 위원과는 상의하지 않고 무슨 방송을 보고 아는 경우가 있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정책관에게 강력하게 항의 했습니다. 예술정책관은 끝까지 “예산 추진의 방식과 확보 문제 때문에 마지막에 문예진흥기금사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서 매우 송구하다.”는 대답만 들었는데요. 나중에 가서야 급박한 사안에 대해 국가예산이 세워지는 세세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고로 추진하다가 안 돼서 문예진흥기금 쪽으로 사업이 축소된 형태로 세팅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7만 원, 5만 원, 4만 원, 3만 원, 2만 원 등 차등 형태의 제도 운영이 가능했는데 원래 500억 예산이 대폭 축소된 형태라서 8,000원에 몇 명만 남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금액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8,000원으로 했던 것은 2~3만 원이 관람액이니까 그 중에서 40%로 보고 8,000원을 결정한 것이고요. 이후에 영화 같은 경우 주말이 12,000원, 주중이 10,000원 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6,000원이 뒤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계할 때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1+1을 했었는데 처음에 5만 원인 부분을 예산 소진을 다 못하니까 7만 원으로 옮겼고요. 2만 원이던 연극이 4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해먹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또 순수예술 쪽의 현장 의견수렴을 문체부에서도 같이 했었는데요. 이것을 8,000원으로 하면 가격을 올리든지 하는 것은 덜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8,000원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홍남기 부총리 얘기가 나왔고요. 인터넷을 보니까 8,000원으로 다 나옵니다. 현장에서 뭐냐 하면 비교대상은 영화와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바꾸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부분이고요. 이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8,000원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이 다 소진할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1+1때는 대중음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지금 반토막 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문체부와 워크숍을 했었는데 저희도 걱정했던 게 뭐냐 하면 장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화산업 쪽 측면에서 음악 부분도 제기를 할 것이고, 우리 쪽으로 와서는 반토막 난 예산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판에 과연 문제가 되면 문체부는 알고 있으라고 하는 인식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순수만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강윤주 위원

- 저는 가격문제보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국고로 하려던 것을 문예진흥기금으로 하는데 위원장은 알지도 못하는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노조와 미팅을 하면서 저희가 점잖게 예술위원으로 앉아서 거수기 역할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닌데요. 이런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위원들의 의견이 강력하게 문체부나 기재부에 제시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혼자만이 아니라 위원들도 같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무엇이 가장 좋은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단 기자회견이라도 하는..... 그러니까 저희는 원치 않은 돈을 원치 않은 방식으로 쓰는데 그냥 의결하는 사

람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계속 묵과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인
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길게 논의를 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어진 역할 안에서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이용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씀은 주어진 제도를 우리가 계속 수용해야 하는지?

○박경주 위원

- 저도 질문인데요. 우리가 부결하면 이것은 사업이 안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부결하면
되겠네요. 부결을 하면 들어주실 것 아닙니까?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저는 부결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물론 직접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예술계에 가는 몫이 있습니
다. 두 번째로는 6기 위원님이 하실 때..... 원래 한 세트로 움직이는데요.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부분이고 예산은 급하니까 1차로 130억을 통과시켰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7기 때 승인하도록 말씀을 하셔서 오늘 논의할 수준이 되어 논의 했던 것입
니다. 외부에서 보면 위원회에서 모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6기와 7기가 서로
다른 결정을 하는 문제가 있고요. 결국 이 사업의 수혜는 어쨌든 예술계에 돌아가는 몫
이니까요.

○강윤주 위원

- 어쨌든 예술계에 돌아가는 몫이라고 해도 이 돈으로 안 썼으면 원래 예술위에서 쓰려
고 했던 돈 아닙니까?

○박경주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그냥 사업을 구성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예술가들한테 도움이 되고
관객들한테도 도움이 되도록요.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해서 죄송한데 가결하면 어쨌든 저
희가 다 책임을 지고 가야 하는데요. 저희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 가결하고 저희가 거기
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그런데 2차로 28.8억은 국회로 가 있고요. 총 130억 플러스 28.8억인데요. 외형적으로
는 지금 통과가 된 겁니다. 내부에서는 사업집행을 누구로 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러면 저희의 의견은 형식적인 건가요?

○전효관 사무처장

- 프로세스를 보면 형식적으로 위원회의 권한이라는 게 없다는 것을 실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권한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사실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도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형태는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예경에서 반응을 보다가 예경 입장에서도 “문화부와 직접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임 권한이 있으면 사업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거든요. 행정 용어로 하면 예경의 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우선협상대상’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사태의 본질은 우선협상이 결렬된 겁니다. 우리가 타 기관을 존중하는 것과 타 기관과 업무를 함께 하는 프로세스가 너무 혼돈스러워서 이것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저도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아는 공공기관이 서류를 보내지 않는다.” 예경과 하는 사업을 그냥 기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윤주 위원

- 저는 송 본부장님의 말씀이 너무 충격적인데요. 저희의 의견이 형식적이라는 것을 회의록에 담겨도 되는 것입니까?

○박경주 위원

- 담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강윤주 위원

- 이런 형식적인 의결을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건가요?

○박종관 위원장

- 선택적인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모든 게 형식적인 의결은 아니죠. 저도 처음 현장 간담회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은 사업은 하지 말자.” 이것을 제일 걱정했는데요.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렇게 현장 의견을 받으면 그나마 이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의견들을 받으면서 사업을 최대한 조정하여 현장의 힘이 되도록 이 사업을 빨리 세팅해서 진행 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지금 논의를 해 보면서 다시 다 원점으로 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소 혼돈스럽죠.

○박경주 위원

- 그런데 그 원점이라는 것은 애초에 저희하고는 협의가 안 된 상태고요. 위원장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가 나갔다는 것이 문제니까 저희가 보도자료를 뿌리죠.

○조기숙 위원

- 지난번 위원회 때 논의되었던 얘기를 기억해 보면 물론 그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이라든지 논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시다. 하지만 158.8억이라는 것이 위에서 결정돼서 문화예술기금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없앨 것인지? 이것도 일종의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니까 우리가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지난번 시간에는 이것을 받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간단하게 의결하지 말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으니까 어떻게 좀 채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근접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리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이원재 위원

- 조기숙 위원님이 지난번 논의에 대해서 정리는 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의견이거든요. 지난번에 문제를 몰랐던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하자는 의견인데요. 그 사이에 다시 벌어진 것은 예경센터에서 그 이후에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것이고요. 제 생각에 상식적이라면 와서..... 무슨 권위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 관계가 되려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이 안 되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새로 발생한 문제고 다시 원점으로 돌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분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내용을 못 받았고 의결도 못 했는데 이것을 서면결의하고 우리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못 하겠다.”, “다시 회의를 열고 보고를 해라.” 감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수정 사항을 요구해서 하고 진행사항에서 이런 것에 대한 재발 방지에 대한 것들을 요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상관없이 조금 더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이라는 위계적 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백지화 한다는 것과 다르게..... 어쨌든 이게 6기와 7기 사이에 애매하게 걸려있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7기 위원회가 이번 사건에 대한 코멘트를 문체부나 예경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의결을 하지 않을 거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을 질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관행처럼 결정한 다음에 어쩔 수 없으니까 도와 달라는 식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정식으로 얘기를 남기는 정도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뒤에 것은 정리를 해 주시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중하고 원칙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후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박종관 위원장

- 주신 의견들을 잘 받아서 예경의 본부장과 팀장을 만나서 심도 깊은 대책을 빨리 만들도록 실무에 지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가 100% 만장일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8인이 찬성을 하시는데 2인은 반대하시거나 기권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의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술위가 단일한 목소리만 내겠어요.

○강윤주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들어가셨는데 현장의 의견은 어떻게 돈을 잘 쓸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나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정말 없었나요?

○조기숙 위원

- 저는 무용계 간담회에 경청을 했습니다. 무용계의 얘기를 제가 100% 전달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무용계에서는 8,000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무용계에서는 무관객 공연을 한다거나 온라인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같은 기술로 전달해요. 그러려면 최소 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도와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8,000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지만 그것도 없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도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않고 현장에 있는 예술가들을 돕는 것으로 수렴을 해야죠. 158.8억이 작은 돈입니까? 우리 예술계를 주려고 했는데 과정과 절차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것은 시정해 나가야 하지만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정부에서 예술가들을 위해서 관람객에게 8,000원씩 지원하는 것이 어덯습니까?

○강윤주 위원

- 무용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요약본에 나와 있으니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저의 질문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지금은 제작 지원이 더 중요한데.” 라는 발언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쭙본 겁니다.

○유은선 위원

- 당연히 있었고요. 그래도 만약에 이것을 예술위원회가 해야 한다면 1%라도..... 왜냐하면 뮤지컬이나 국악, 연극은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강윤주 위원

- 연극계에서도 “아니다.”라는 것이 전달되었다고 들었는데 보고서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 것인가?”만 들어가 있어서 여쭙보는 겁니다.

○정유란 위원

- 간담회의 주제할 때 취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인가로 출발했기 때문에 모두가 그것을 알고 오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향유자들에게 관람료 지원사업이라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고 “이대로 가도 되겠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다들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마.”라는 의견이 아니라..... 계속 질문을 드렸을 때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변경될 수 있는가? “8,000원이라는 금액은 확정이다.”, “변경불가하다.” 연극과 뮤지컬 쪽은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매수를 증가시킬 수 없는가?” 그러면 “불가하다.” 그리고 “1+1을 할 때 예산이 300억 이었는데 245억밖에 소진되지 않았다.” “이 단위로 추진했을 때

분명히 예산의 소진이 불가하다. 왜냐 하면 2월까지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대안을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지금은 준비할 수 없다. 한 달을 시행해 보고 나서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다시 얘기해야 된다.” 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강윤주 위원

- 간담회가 그런 분위기로 진행되었다면 그것은 예정된 답변,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모은 것밖에 더 됩니까? 저는 간담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출 감사

-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지금은 비상시국 아닙니까? 비상시국에 비상적인 방법으로 위원회의 실력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국민들의 향유 측면과 예술인들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회경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과연 이런 국면에서 회의가 늦어져서 관람객이 들어올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금이 들어가는 것은 시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비상시국에 비상적인 방법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경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되는 것이죠. 보조사업자가 말을 안 들으면 사업자가 직접 하는 것이죠. 예술위 직원들한테 너무 부담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것은 현장과 밀접한 사업이고요. 그렇게 비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체부와 예술위 사무처 간에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강윤주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부터 바꿔서 바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 혹은 “컨트롤타워를 만들자.”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소위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체부도 사업 아이디어를 내는 기관에 있어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제가 문체부를 대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제가 예산을 다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재부에서 “며칠까지 코로나 관련해서 내라.” 라고 하면 거기도 급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원에 대해서 생각 없이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기재부와 협의를 하면서 안 되니까 기금으로 돌리는 부분도 예산을 다뤄봤던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통과 무용이 국립이나 공공극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구성이고 매출액이 1.89%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각 2%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찰시키려고 문체부와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업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6기 위원님이 계실 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지금 돌리기에는, 예를 들어 다른 사업으로 말하자면 창작으로 했을 때 158.5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향유 쪽이고요. 그런데 다시 이 사업을 필요한 창작 쪽으로 간다고 하면 다시 문체부와 얘기하고 기재부와 얘기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국회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술위원회 혹은 현장의 얘기를 들어서 사업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자.”라고 직원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추

후에 보강한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예경이 어제까지도 ‘한다’, ‘안 한다.’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하겠다고 했고 저녁 8시 이후에 결정되어서 준비가 덜 되었을 겁니다.

○이원재 위원

- 죄송합니다만 어제 밤까지 예경센터도 이 사업을 ‘한다.’, ‘안 한다.’라는 고민을 했다는 건가요?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예, 문체부 내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원래 디자인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디자인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국장님까지 보고가 안 되었으니까 밑에 분들은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경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문체부와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올리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이 하나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라는 질책을 들으면서 부결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해 보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 걱정을 해서 처음에는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쪽으로 논의했던 것이 어제까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그동안 딜레이 된 것이 있어서 오늘 오전까지 있는 그대로만 주면 이런 얘기를 하고 의견을 담아서 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받지를 못 해서 제가 회의하기 전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공문을 보낼 테니까 조속히 보내 달라는 식으로 통보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위원

- 저는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 회의에서도 원칙을 정했고요. “현장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서 하는가?”에 대한 과정을 진행해 온 것인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장에서 훨씬 더 이 사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것은 2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못 쓸것이다.”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8,000원은 유인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코로나를 안고 가야 하는 상황에서, 물론 예술계를 살리려면 공연을 해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조심하라고 매일 문자들이 날아오는 시국인데요. “정부에서 하는 이 정책은 모순된 정책이 아닌가?” 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게 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공연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요. 그래서 지금 홍보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홍보 자체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런 의문도 제기되었거든요.

○전효관 사무처장

- 지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가 되었는데요. 조금 정리를 해 보면, 사업이 위원회의

의사와 무관하게 했던 것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이해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은 크게 보면 소비를 진작하는 목적에서 여러 가지 티켓사업들을 국가가 만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회의 기금으로 편성된 이상 예술계에 도움이 되는 형식으로 해 보자는 것이 위원회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의 일환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를 들면 이해를 구하기도 하고 맞는 설계로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모색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합의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안 해봐서 그러는데 시뮬레이션을 하면 다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소진이 될 것이냐?” 제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금으로 편성되어서 못 쓰면 다시 기금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국고라면 다른 문제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맞게 쓰면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과 방역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소규모 예술단체들이 지속할 수 있는 약간의 시드머니를 확보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의 설계가 이 맥락들을 보면서 진행하고 변형도 하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경의 태도가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들을 같이 하지 않으면 저희가 용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예경도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명료하게 확인받지 않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꾸려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처장님이 위낙 정리를 잘 하셨는데요. 배경 중에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 공연을 할 상황은 안 되는데 정말 재원이 없어서 못 하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도 3차 추경에 창작 디딤돌 관련한 사업이 증액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면서 현장이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예술가를 직접 조건없이 지원하는 지원제도의 확장에 대해 대안점이 생긴 겁니다.
- 여기까지 논의를 해 주시고요.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이시백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시백 위원

- 위원님들과 사무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전체적인 개요에 감이 와서 대강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제 나름대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곁돌고 있는 논의의 간격을 제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기재부 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문화예술의 발전과 우리 아르코의 예술위원이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이나 정체성 자체가 애당초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코로나가 진행 중인 지금 창작자와 예술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위축된 문화산업을 어떻게 부양할까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정부에서 바라보는 문화예술의 주체를 셋으로 보는 것 같아요. 현장 창작예술인과 문화융통산업 그리고 문화를 헌법적으로 향유할 권리가 있는 시민이나 국민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 사업은 저희가 볼 때는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문화예술가들, 창작자들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별도의 창작지원사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창작자를 위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나머지 2개 주체, 코로나로 인해서 문 닫을 위기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 업체, 공연시설 등과 더불어 그동안 코로나로 단절되어서 누리지 못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 같아요. 배경에는 경기부양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틈새에서 이 돈을 더 열악한 창작자에게 돌려주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만 사업의 취지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공감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업이라면 국비로 마땅히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왜 예술위원회 기금을 가져다가 하면서 일방적으로 논의 절차도 없이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술위원회는 그 논의에 한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위원장도 사전에 알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특히 간담회를 우리가 가진 이상 현장 소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몇 차례 간담회를 마련하셨는데 이후에 현장에서 장르별로 “고무적이다.” 또는 “안 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전향적인 의견도 있지만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반영할 때 위원장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장의 소리를 듣자고 해서 들었는데 무시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 사무처에서는 난감한 입장일 겁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의결하지 않았을 때 그 돈의 문제는 그대로 있을 테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아르코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려면 문체부를 설득해야 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론적으로 이 사업은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주 위원

- 저도 이시백 위원님과 거의 같은 의견이고요. 어떤 기체가 돌아가고 있다고 치면 거기

에 기름을 넣어서 기계 안에 기름만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오로지 이것은 유통업체를 위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공연을 보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진행 중인 사회에 살고 있고 지금 2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문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공연을 보러 가라고 장려하는 것이죠. 사무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다 쓰일 확률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아직 국민들이나 일반 관객들이 자유롭게.....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생명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내가 자유롭게 공연을 보러갈 수 있는 심리적 상황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남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공연 제작자들도 8,000원을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 되지 않는데 결국 유통업계에 기름이 한번 흐르고 끝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의 문예진흥기금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7기 위원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쁜 게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할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비판하기 보다는 그쪽에서 “어떻게 할래?”라고 할 때 저희가 내놓을 수 있는 대안들을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홍태림 위원

-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160억 가까운 기금을 털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5월 정기회의 때도 저희가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논의를 다시 되돌렸을 때 이 기금으로 다시 사용하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나간 형태고요. 이 기금을 사용했을 때 유통업계에 많은 방점이 찍혀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어쨌든 예술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타이밍에 접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저는 5월 정기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술경영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일방적으로 얘기한 문화체육관광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원래 문화예술정책실장님이 오시면 이 얘기도 같이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화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자율경영협약서 얘기입니다. 저희 협약서 내용이 많이 후퇴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후퇴에 대한 인식이 이어지면서 이런 사업과 관련된 연속성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것을 처음으로 되돌려서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예요. 일단은 저희가 책임을 저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면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부와 자율경영협약서까지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지만 저는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그런데 자율경영협약서 얘기를 하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홍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은 넘겨주고 “일단 논의를 합시다.”라고 했을

때 기회가 또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항을 얘기하려면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데요. 이 사업에 대해 마땅하지 않은 마음이 비슷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결의를 하기 전에 최소한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뭔가는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자연스럽게 위원회의 결정권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선 자율경영협약서 문제는 블랙리스트 관련한 후속 대책이었고, 논의가 끊어져 있으니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홍태림 위원님의 중요한 지적 충분히 들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

- 저는 의견을 드린다면 아까 의견과 같은데요. 결론은 아마 사무처장님이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위원회 우려사항들이 예경센터에 전달이 되고 예경센터가 그 부분에 동의한다는 약속 하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술위에서 직접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창작과 유통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이 달라요. “그렇게 분리 접근하기 힘들다.” 아르코의 지금까지 역사나 정책, 지원구조가..... 저도 당연히 예술이 가장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금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것은 그렇게 분리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관련해서 이 사업에 현실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출구나 대안이 없는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남은 기간 동안 150억 등의 긴급제안을 부결시키고 그것을 가져갈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한번에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1973년 이후부터 있었던 관계라는 것을 2~3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예요. 그 대신 의견을 남기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이후 문제부나 파트너..... 공공기관끼리 힘겨루기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에 대한 것들로 접근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는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위원회 위상이나 권한, 기금의 원칙이라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은선 위원

- 질문이 있는데요. 34페이지 위쪽에 보면 예경에서 수차례 현장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했고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수립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현장은 무엇인지가 궁금하고요. 초창기에 여기에는 왜 예술위가 참여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공연기반부에서 예매처 및 제작자 대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인들이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 예술위가 처음부터 예경과 같이 하지 않았는지? 왜냐 하면 문제

부에서는 현장 결정을 한 것인데 왜 그러냐는 것이거든요.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2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위원회 회의 때도 정유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월 13일 장관님이 참석하셨던 문체부 제1차관 회의가 마치 관람료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나왔던 것인데요. 기금으로 애초에 편성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많이 만났다고 항변을 합니다. “우리가 책상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현장수렴의 데이터에 의해서 만든 것이다.”라는 말을 각 장르별 간담회를 했을 때도 예술경영지원센터 부서장이 직접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30페이지 1차, 2차, 3차 중에 현장관계자의 의견수렴은 아까 이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장관계자는 반드시 예술가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들어오면 마치 지금 재난기금을 쓰듯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사전에 저희 부서에서..... 저희들도 학습을 해야 이후에 간담회를 하고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관객평가단으로 참여했던 분들은 이것은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예비 단계를 위해 저희가 만났기 때문에 그것은 다릅니다.

○유은선 위원

- 왜냐 하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누구와 얘기할 것이고 그 현장을 어디로 볼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그래서 표준화 시켜서 추진 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유은선 위원

- 그렇죠. 왜냐 하면 기획사, 예매처는 사실상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전효관 사무처장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부 등이 설계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은 아마 공연 관람료를 특정해 놓고 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의견을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현장 간담회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사무처에 한 적이 있어요. “좀 줄여서 하면 안 될까?”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장의 유의미한 방향으로 재설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위원회에 주어진 과제니까요. 사업파트너와 어떤 관계를 갖고 조율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의견들을 종합하고요. 저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명료한 확약을 하지 않는 한 이 사업을 자체 진행한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 기금과 국고 얘기가 어제 문화부 워크숍에서도 나왔는데

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가는 기금에서 지원하고 다른 사업들을 발굴해서 정책사업들은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입장에서는 기금이 들어올 출처가 거의 붕괴된 상황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국고나 기금이냐는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이기도 하고요. 문화부와의 관계를 재설정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이미 주어진 형태 속에서 최선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의 프로세스를 책임진다면 이런 형태로 하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조금 보태자면 지금 박경주 위원님, 강운주 위원님, 이희경 위원님 모두 우리 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관 자율성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율성 확장 문제나 혹은 그것을 보장받기 어려운 개선안 차원을 함께 포함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진희 위원

- 예, 너무 복잡해서 머리 아프게 들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예술위원이 아니었다면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이콧을 할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의결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의결을 시키거나 부결을 시키든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문제라서요. 어쨌든 주체로서 책임져야 할 포지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탠스가 필요한가?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아주 복잡해지네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쉬는 시간에 했는데요. 아주 심각한 절차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머리가 복잡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지금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실리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스탠스로 전략을 짤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사무처장님이 말씀해주신 안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 부분이 좀 큰데요.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다고 했을 때 그것은 사업의 방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기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을 목표로 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보다는 예술위 입장에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장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을 안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종관 위원장

- 조금 짚어 주시죠.

○이진희 위원

- 예, 예경한테 우려사항과 문제의식을 분명히 전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경이 어떤 입장을 갖고 답변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 따라서 예술위가 직접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얘기를 수렴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반영시킬 것이냐는 과정까지 우리가 책임성 있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영할까”라는 전략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안이 있는 거죠. “하지 않

는다.”, “부결시킨다.”라고 했을 때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하나의 안으로써 처장님이 제안해 주신 것이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으로 갈 때 후속전략으로 필요한 프로세스.....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나?” 라는 것과 현장에서 얘기들은 것들을 우려사항으로 예경에 전달했는데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예술위가 직접 한다고 했을 때 현장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서 진행시킬 수 있느냐는 안이 마련되어야 반대 입장을 냈던 사람도 설득되면서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요약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예술현장의 요구에 대한 대안이 반영되는 설계를 중심에 두는 문제, 어떻게 보면 예경이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예술위가 직접 추진할 것이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처장님 말씀을 성안해서 말씀드리면, 그 문제를 우선 예경과 접촉해서 실천될 수 있는 대안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 보는 것이 하나의 안이고요. 그게 만약 충족되지 않는다면 예술위가 직접 하는 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내용을 접수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전고필 위원

- 저도 머리가 무거운데요. 자료를 미리 주신 것을 보고 빨간 줄로 그어놓았습니다. 문체부가 이 사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이전에 해 왔던 것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부총리가 결정해서 문체부에 왔다. 와서 문체부에서 뭔가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들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털어서 쓰라고 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술위는 왜 다른 소리를 하나고 하는 그 말과 뭐가 다른가?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언어가 정말 문체부가 예술위원회를 바라보는 태도가 그러합니다. 예술위원회 위원은 그들이 봤을 때 위원들도 손만 들고 가면 다 해결되는 문제이고 예경센터와 예술현장의 얘기를 다 듣고 세팅을 했는데 너희들은 왜 판지를 거냐? 그것은 사무처가 예술위원을 설득하지 못한 것 아니냐? 사무처는 예술위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켰냐? 그렇지 않은 것인데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태도라도 변한 것 있었나? 변하지 않은 채 이런 것을 강요하고 있으니깐 더 발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유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이것을 정말 필요한 방식으로 쓰고 싶은 말을 해야 하는데 이 말이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깐 너희들은 따라서 하라는 태도에 대한 얘기를 원론처럼 얘기하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그 메커니즘을 바꾸고 문체부도 예술위원회를 존중하는 태도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 싸움을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은 예술위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문체부와 예술위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의 예술실장이 부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제기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직도 못 나와요” 같은 말로 분명한 항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박경주 위원

-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전고필 위원

- 만만하게 보냐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예술위가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현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의견이 아예 관철되지 않은 채 그쪽에서 내려오는 것을 수행하는 기관 정도로 생각하는 당신들의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는 저희들의 의견들이 강하게 전달되고 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저희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든 아니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문화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앞으로 자율협약까지 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은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술위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예경센터도 말 못할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택배회사도 아니고요. 그 안에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거기도 똑같이 현장을 고민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이 있습니까?

○강윤주 위원

- 지금 이진희 위원님도 그렇고 전고필 위원님도 그렇고 몇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게 구체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논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요. 그 논의를 지금 할 것인지? 아니면 예술위원들만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그 얘기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성안할 수 있으면 필요성 등을 짚어 주시죠.

○전효관 사무처장

- 제 생각에는 이 사안은 넘어가는데요. 예술위원회의 입장이나 권고,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별도로 논의를 하자는 것 같아요.

○강윤주 위원

- 별도로 논의할지 여기에서 논의할지를 여기에서 결정하자는 것이죠.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효관 사무처장

- 일단 오늘 나온 의견을 접수하신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제가 보기에 이 사항은 접수가 되었는데요. 문화부와 관계나 사업에 대한 방식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입장을 어떻게 논의하고 결론을 내고 향후 또 다른 방식을 동원할 것인지를 추가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주 위원

- 이것이 접수가 되면 다음에 서면결의를 하는 건가요?

○박종관 위원장

- 오랫동안 논의한 끝에 이미 이 사업을 하자말자는 논의는 지난번에 했고요. 이번에는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예술현장의 요구가 어떻게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중심에 두는 대안을 먼저 설계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에게 이 사업을 집행하게 하거나 혹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거나 하는 안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확인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윤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들이 있을텐데 어떤 형식으로 논의하고 어떻게 논의내용을 실행단위에 전달할 것인지? 사실 이 문제는 소위에서 논의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데요. 안 된다고 하면 별도로 전체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죠.

○강윤주 위원

- 저는 꼭 소위에서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톡방이 있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미팅이나 화상회의를 해서 성명서까지는 아니라도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나누는 것은 단톡방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시죠.

○박경주 위원

- 예, 동의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가 안을 만들고 그 안을 보시고 논의하시면 어떻겠어요?

○이원재 위원

- 이 건에 대한 것은 통과를 하고 이 건에 대한 의견은 사무처가 보완을 해서 의견서를 달아서 보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원회 독립성 관련된 것은 따로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들끼리 그 부분을..... 오늘도 논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외부조건의 권력 관계 안에서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어떻게 유지되느냐에 대한 전략 논의는 위원들이 따로 회의를 잡든 토론을 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윤주 위원

- 그래서 저는 방법론적으로 화상회의를 제안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정기회의를 화상회의로 하기는 어렵다고 하면 저희 예술위원들만이라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화상회의를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채팅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

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러면 접수를 받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 고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당초에는 의결안건이 3건, 보고안건이 4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5건으로 되었는데요. 2020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극분야 중간발표 지원심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력개발원 성윤진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성윤진 예술인력개발원 과장

- 2020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연극분야 중간발표 지원심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 추진경과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정시공모를 통해서 지난 10월 공모가 되었고 12월 지원심의를 통해서 총 8개 분야 47명을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선발 완료한 분들을 대상으로 최종 발표 지원금에 대한 예산 확정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중간발표를 취하는 방법이고요. 분야별로 발표를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6월에 연극분야만 진행하게 되어서 연극분야에 대한 지원심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극분야 중간발표 지원심의를 지난 6월 12일날 진행되었으며 저희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실험무대에서 참가자들의 공연에 대한 실연과 PT발표 인터뷰 심의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극작 분야와 연출 분야로 나뉘는데요. 극작이 2명, 연출이 4명으로 해서 총 지원예산은 1억 3,500만 원에 대한 최종 발표 지원금을 확정하는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극분야 중간발표 지원심의를 한국창작아카데미 사업은 전담심의위원제를 적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담심의위원 5인이 심의를 진행하였고요. 전담심의위원 명단은 50페이지를 보시면 민세룡, 오세혁, 전강희, 전인철, 한민규 등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지난번 정시공모 심의를 함께 진행하였으며 저희 아카데미 사업에 그룹멘토링과 코치를 함께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51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6월 12일 실험무대에서 진행한 지원심의회 회의 추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서류심의를 통한 전수검토제와 발표심의(심의참관제)를 통해 했습니

다. 각각 작품에 대한 실연은 15분씩 PT발표 10분, 인터뷰심의 15분씩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심의제척 및 제척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이고 지원심의 결정액은 총 1억 3,4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극작 2명은 최대 배당이 1,500만 원씩 배당되었으며 연출 4명에 대해서는 나머지 예산 금액을 가지고 선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오늘 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지원심의결과 발표는 다음 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심의결과 발표를 통해 7월 중 발표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에 대한 지원심의 결과는 52페이지를 보시면 각각 지원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보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지원심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의견을 말씀하시죠.

○조기숙 위원

- 경쟁률은 어떻습니까?

○성윤진 예술인력개발원 과장

- 정시공모에 대한 경쟁률은 49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298건 중에 연극분야 연출이 47건이 들어왔고요. 극작 24건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극작 2명, 연출 4명으로 해서 6명을 완료한 것이고요. 중간발표는 별도 탈락자가 없이 전체 지원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액 결정에 대한 심의만 진행을 하였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처럼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홍태림 위원

- 전담심의위원제도에 예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남녀비율이나 지역의 문제는 심의위원 풀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성윤진 예술인력개발원 과장

- 전담심의위원회는 작년에 지원심의운영규정을 신설하면서 저희 사업을 시범운영하게 되었고요. 저희 심의위원 풀 외에도 전담심의위원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의위원 풀 외에 실질적으로 멘토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고요. 지원심의 일정이 빠듯하다보니까 12월에 진행이 가능한 분들로 섭외를 진행하다보니 전체 풀에서는 지역과 성별을 안배해서 진행했으나 섭외 과정에서 여성 1인만 구성되고 모두 서울에 계신 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홍태림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주 위원

- 심의위원을 섭외할 때 연극 쪽은 여성을 많이 넣어 주세요. 연출은 항상 남성이 들어가 있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세요.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질의가 나온 김에 전담심의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데이터가 없죠? 저희가 아주 일상적으로 지역비, 성비, 연령비는 가지고 가야 하거든요. 이것은 약간 불균형이 있거든요.

○이희경 위원

- 그 문제는 일단 저희 풀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박경주 위원

-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지만 성비와 같은 것을 계량해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보고안은 코로나19 피해 대응 관련 전시관람료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윤희 시각예술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전시관람료지원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연관람료지원사업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에 대해서 난감합니다.

이 사업도 역시 공연관람료지원사업 방식으로 문체부에서 국고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갑자기 기금으로 편성되어 왔습니다.

일단 보시면 52억이 선정되었고요. 관람료지원으로 48억, 사업운영·관리 4억으로 해서 52억입니다.

그리고 주관기관은 예술경영지원센터로 공연관람료지원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온라인 주요 예매처 및 오프라인 미술관, 전시공간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인쿠폰을 제공하는데 3,000원 정도의 할인쿠폰을 160만여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나 할인쿠폰 금액을 결정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18년도 유료전시 월 평균 관람객 82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2개월 수준으로 한 것이고요. 단가는 평균 관람료 9,800원의 30%수준으로 해서 대략 3,000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공연료관람지원과 다른 점은 미술 쪽은 워낙 온라인 주요 예매처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30%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카오톡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현장에서 예매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카카오톡으로 전체적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발행된 쿠폰을 가지고 온라인 주요 예매처나 오프라인 미술관이나 전시 공간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등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1인당 최대 12매 정도로 카카오톡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는 온라인 예매 또는 현장에서 할인쿠폰을 활용하고 온라인 예매처는, 이것도 역시 공모를 통해서 예경에서 일단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파크라고 하면 인터파크에서 사용하고 온라인 예매 진행 후 할인쿠폰을 정산하는 방법이고요. 현장에서 사용한다면 전시공간을 직접 가서 할인쿠폰을 보여주고 그것을 미술관에서 정산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현장구매 사용자의 할인권을 실시간 관리하는 것을 별도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1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세팅되면 미술관이나 이런 공간과 같이 홍보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58페이지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의견을 나눠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백 위원

- 이 사업이 결국 아까 공연과 장르만 다른 것이라 깜짝 놀랐는데요. 그것을 묶어서 논의를 해야 하나요? 나중에 하면 장르별로 격차가 생겨서요.

○박종관 위원장

- 별도로 논의하는 게 맞으니까 올린 건데요.

○박경주 위원

- 이것은 이시백 위원님 말씀대로 묶어서 같지 어떻게 할지? 장르의 차이는 있으니까요.

○박종관 위원장

- 그러나 논의 내용은 다릅니다. 일단 액수도 다르고 적용방법도 다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간 유통이나 소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차원이고요. 굳이 이해를 하자고 그러면 기재부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산을 국고로 편성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미술 쪽 사업은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온라인을 통해서 예매를 하는 관행도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톡 등을 통해서 추진을 시범적으로 해 본다는 것이 지금까지 논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유란 위원

- 질문이 있는데요. 공연관람료지원사업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었을 때는 관람료지원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공연장이 열리지 않으면 이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미술 쪽은 전시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인가요?

○박종관 위원장

- 그렇지 않습니다.

○정유란 위원

-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사업의 형태가 어떠하냐가 아니라 어쨌거나 연극·뮤지컬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현장에서는 공연을 하려는 의지들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정책의 방향성이 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인데요. 관람료지원사업 자체가 어떠하다는 것보다 이 와중에 이런 준비를 한다는 게 뭘 하자는 것인가?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정유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문체부에서 하는 얘기는 원래 코로나 이후 빠른 회복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부분은 창작지원으로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수요는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금을 쓰지 않고 바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것이고요. 그게 안타깝다기보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강윤주 위원

- 불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전효관 사무처장

- 예산편성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강윤주 위원

- 아까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코로나 비상시국이니까 비상시에 맞는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요. 예술위 직접 지원이라는 게 비상시에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왜 이것은 안 되고 저것만 되느냐는 것이죠.

○전효관 사무처장

- 사업을 만들면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안)을 만들어서 문화부와 협의하고 기재부가 승인을 해야지 기금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면서 만들어지기 보다는 코로나 시기에는 1차, 2차 추경을 만드는 과정이 일주일 단위로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상적인 제도에서 벗어나 있고 더군다나 기재부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 생태계 지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경제성장률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냐?”,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이냐?” 이런 총량지표를 관리해야 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설계하는 것이니까 저희처럼 논의과정이 필요한 일들을 설계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박경주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자문하는 분은 누군가요? 전문가 자문그룹이 있나요?

○홍태림 위원

- 국공립 사립미술관이나 기획사 예매처인데요.

○정유란 위원

-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박경주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짠 게 누구인지가 궁금해요. 문화예술 쪽에 계신 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행정만 하신 분인가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할인쿠폰은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쪽에 만들면 전시관람료도 있고 박물관 쪽 관람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문화예술 쪽의 관람료지원으로 해서 영화 등 전체적으로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주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업을 기획할 때 전문가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행한 사람이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전문가들이 중간에 들어가는 식이니까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고요. 그런데 관람료지원사업에서 우리가 고려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에 미술계, 예술계는 전혀 배려가 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전에 아티스트피에 대해서 노조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사립미술관이 아티스트피를 주나요? 안 주지 않나요? 그래도 공연예술사업은 그래도 공연단체가 자기 개런티라도 가져가는데 미술 쪽은 정말 미술작가들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톡이라고 예시를 들었는데 1+1사업을 할 때 공연 쪽에도 한쪽에 공연사를 몰아줘서 그것에 대해서 반발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을 보니까..... 사실 아까 상황과 이것은 별도이기는 하지만 비슷하게 고려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더욱이 작가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은 공간 위주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작가들은 살기 힘들어 죽겠고 당장 집에서 나가고 작업실을 내놓아야 하는 작가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전시지원을 받았으니까 전시해 달라.”라고 하고 결국 그 사람들에게는 작가페이드 안 갈 것이라는 말이죠. 저는 이런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부조리한 와중에 코로나 라는 핑계로 더 예술가들을 힘들게 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싶어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다 아시겠지만 이 사업들은 작가나 예술가를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기획재정부나 문화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소비자를 위한 소비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박경주 위원

- 그런데 작품은 작가가 가져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사업에서는 약간의 논의가 가능하다면 지원금을 받는 미술관에서는 관람객들이 내는 극장료의 몇 %를 작가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미술 쪽은 그런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예술가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없는 와중에 이런 사업을 구상했는데 52억 이라는 큰돈이 흘러가는 시장 안에 작가에게는 전혀 혜택이 가지 않는다면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태림 위원

- 여쭙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사업은 추진계획(안)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바꾸거나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인가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보통 공연관람료지원사업과 같이 전시관람료지원사업 52억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홍태림 위원

- 그러면 그것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예. 관람료지원사업과 같은 것입니다.

○정유란 위원

- 3,000원은 아닐 겁니다.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일단 3,000원은 저희들이 봤을 때 평균 관람료가 9,800원으로 받고 있는데 차이는 납니다.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급은 15,000원에서 20,000원을 받는 곳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미술관이나 사립미술관은 대부분 5,000원에서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 쪽에서는 입장료가 3,000원 이상이면 3,000원 그리고 4,000원 미만이면 2,000원으로..... 그래서 상품권도 2종류로 적용을 해 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경 하고도 그렇게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시백 위원

- 58쪽 추진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5월까지 코로나19로 휴업을 경험한 화랑 147개소. 결국 시각예술가들의 발표공간이기 때문에 위축되거나 문을 닫으면 결국 어려움을 초래하니까 이것을 살린다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147개소가 어려움으로 문을 닫게 된 현실의 원인을 돌아보면 결코 입장료가 없거나 부족해서 못 온 것이 아니라 코로나 위기 때문에 관람객이 줄어든 것인데요. 과연 "3,000원씩 보조를 함으로써 채워질 수 있는지?" 방안이 의심됩니다.
두 번째로는 58쪽 아래를 보면 이러한 제 의구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19 진정 시 단체 관람객을 동원해서 이것을 채우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 이것이 확정되면 사업연도가 언제까지인가요? 올해 안에 다 집행하는 건가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예, 올해 안에 집행됩니다.

○이시백 위원

- 그런데 불행하게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려서 3,000원이 아니라 5,000원 전액을 무료로 해도 안 온다고 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못 쓰는 것이죠.

○이시백 위원

- 그러니까 다른 데에 쓸 수 있는데 불용될지도 모르는 이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다른 사업을 할 여지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시백 위원

- 참 고민이 됩니다.

○강윤주 위원

- 제 생각에 저희가 별도로 하기로 했던 화상회의 때 얘기를 조금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박종관 위원장

- 지금 7기 소위원회 TF구성안 등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내용들이 있고요. 에너지를 다 소진하실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이 정도로 보고를 받으시고요. 전서관람료지원이라는 것은 공연관람료지원의 시각 버전이거든요. 아마 비슷할 겁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전서관람료지원도 당초 공연관람료지원처럼 당초 문화부에서 국고로 하려고 기재부에 가져갔는데 기재부에서 그 당시 추경을 해야 할 것도 많고 재난지원금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마 국가시책으로 최대한 예산에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기금을 활용하자는 국가시책이 기재부에서 결정되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들도 국고로 될 것들이 기금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부가 중간에 국고로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국가시책에 의해서 돈이 없으니까 기금 쪽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문화부에서 도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시책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다음 논의와 별개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예산 성립절차에서 우리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문제점인데요. 지금 현재 관람료지원사업은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제안되었지만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되는 게 있고요. 지금은 기금운용계획이 20%를 넘어섰기 때문에 국회의 승인사업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기금운용변경계획을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예산 지침에 대한 최종 승인은 기재부나 국회에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관람료 3,000원 또는 8,000이 확정되는 순간에는 그 사업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기재부의 승인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위원회에서 3,000원 또는 8,000원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도 변경 협의를 기재부와 해야 하고 거기에서 승인이 되어야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가 20,000원으로 신청해서 올랐다고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의 승인 과정에서 8,000원으로 줄 수가 없다고 하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변경을 하려면 절차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또는 국회의 승인까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재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요. 설명해 주신 취지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노력이 위원회에 없었던 것도 자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것의 쟁점이 뭐냐 하면, 돈을 공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잘못 쓰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고요. 그 의사결정 구조에 오히려 전문가들이 참

여하지 못한 구조가 있는 것이죠. 사실 긴급재난시기에 재난자금이 심각하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둘 것이냐는 권한을 떠나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나 국회에 권고해 주고 제안을 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기들은 “좋은 일을 하려고 문화예술계에 돈을 줬는데 왜 건건이 난리냐?” 그런데 그런 취지는 알고 법적 권한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그것을 가져와야 한다는 싸움보다는 이런 논의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예, 맞습니다. 관람료를 저희들이 들었을 때 기금으로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초 예산규모보다 많은 줄어든 것도 그런 문제 제기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어제 문화부와 워크숍에서도 이런 절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수렴 체계를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까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내후년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TF나 소위원회를 거치겠지만 그런 과정도 문화부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지금 박두현 본부장이 설명한 것인데요. 저희가 어제 문화부와 워크숍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현안은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수립해서 정부안으로 넣으려면 상당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예산을 올해 12월쯤 만들어서 논의를 시작해야 안으로 넣을 수 있지 우리가 그냥 사업안을 만든다고 갖고 가서 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어떻게 보면 위원회와 문체부가 2022년도 사업과 예산에 대해 대등하게 만나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 대책을 함께 세우는 것은 그 절차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개는 문체부가 사업을 만들어서 그냥 위원회에 내리는 구조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절차를 갖는 것은 이전과 비교하여 개선된 의미 있는 절차라는 것이죠. 위원님들 이 사안은 접수를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떨지요?

○이희경 위원

-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도 전시공간 긴급지원 사업 지원신청 접수 결과 보고를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예, 62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심의를 7월 1일에 하는 사업인데요. 심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서면의결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6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전시공모지원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공간들이 문을 닫게 생겼다고 하면서 공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민간 전시공간, 등록 사립미술관, 화랑(갤러리)을 운영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하반기 때 1개의 전시 또는 프로그램 추진 경비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던 전시공간 운영을 하기 위한 임차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규모는 고르게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공간별 최대 300만 원이고요. 사업예산은 총 8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총 283개 공간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62페이지 마지막 표를 보시면 저희가 14일을 연장해서 33일간 접수를 했는데요. 신청건수는 283건이 안 됩니다. 일단 신청건수들은 모두 지원할 수 있고요. 63페이지를 보시면 필수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심의방법이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시각예술분야인지? 어떤 지원 자격이 충족되어 있는지? 그리고 작년의 운영실적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적격성 심사를 해서 저희가 7월 1일 심의를 하고 서면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단체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적격성 심의사업이죠. 너무 급하니까 조건이 되는 곳은 모두 지원하는 적격성 심의입니다. 그런데 준비된 예산이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2,000~3,000만 원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공모를 하기도 어렵고 아카이브 사업을 추가로 하면서 쓰고 이 사업을 빨리 전시장으로 보내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태림 위원

- 긴급지원사업이잖아요? 행정결격 판단에서 필수서류 미제출자 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필수서류를 내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예, 지원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홍태림 위원

- 이것은 긴급사업이라 차후에 서류를 보완하면 되지 않나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그런데 저희가 몇 번 안내를 했는데요. 사실 그날 당일까지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필수서류가 빠졌으니 보완해 달라” 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홍태림 위원

- 얘기는 드렸던 것이죠?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이미 2주일을 더 졌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아침에 전화를 해서 “빨리 내라.”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내는 것은 못 내는 것이 아닌가?

○전효관 사무처장

-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비영리전시공간이 몇 개고 사립미술관이 몇 개라고 파악을 했는데 실제로 접수된 것은 3분의 1일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활동이 정지인 상태에 있어서 통계상 확보한 공간보다 현재 활동을 하고 있거나 유지하는 비영리공간의 숫자가 통계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접수를 받고 의결할 때 또 의견을 내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서면의결(안)을 만들 때 의견을 개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를 받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보고안건은 2020년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심의결과 보고입니다.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64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심의결과 보고인데요. 심의총평은 덜 준비되어서 위원님들께 일단 말씀을 드리고 보완이 되는 대로 서면의결을 거쳐서 빨리 안내해야 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립니다.

일단 주요 추진경과를 보시면 3월 기본계획 의결이 되었고요. 지원신청 접수가 4월 6

일부터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신청 결과로는 공공예술사업 관리형과 자율형, 기획형, 연구지원으로 신청 건수가 15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세부사업 내용이 없기는 한데요. 관리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문화재단이 신청할 수 있고 공공예술작품을 유지보수 혹은 활용하는 프로그램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율형과 기획형, 연구지원사업들은 예술가나 예술단체들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율형의 경우에는 단년도 사업이 있고 2개년 사업으로 나뉘어서 예술가나 예술단체들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형은 예술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사업의 주제를 정해서 공공예술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미디어아트와 기후위기 등 2가지 주제를 가지고 10억 정도의 예산으로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예술 관련해서 리서치 그러니까 내년도나 내후년도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연구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50건 정도의 지원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특별하게 전담심의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와 위원님께서 필요인원을 2배수로 구성해서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로 섭외를 추진했구요. 그 결과는 심의위원 명단을 보시면 강수미, 이영옥, 치명타(최은혜), 양지윤, 김인규 등으로 해서 여성 60%, 비수도권 20%, 신진 40%로 구성되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심의로 서류심의를 거쳤고요. 2차로 PT심사를 이번 주 화요일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심의 선정 총괄표를 보시면 관리형 2건, 기획형 1건, 자율형 8건, 연구지원 8건으로 총 19건이 선정되었고 지원결정액은 27억 8,500만 원이고 10억 정도 불용이 났습니다. 워낙 심의위원들께서 정말 좋은 것을 선정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불용액의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처음 하는 사업이고 예술위원회가 공공예술사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스탠스가 강한 사업이니까 좋은 것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10억 정도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부터는 관리형, 자율형 1차 때 결과 그리고 71페이지에는 PT심의 결과 결정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이희경 위원님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이희경 위원

- 제가 공공예술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간담회를 했잖아요? 간담회에 제가 가서 보면서 굉장히 좋고 새롭게 하는 사업이라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사업이기 때문에 명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불용을 감수하고 하신다는 얘기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간담회를 할 때도 들었던 생각이고 결과를 보면서도 든 생각인데요. 이것은 사

실 공공미술사업이 확장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미술만 공공예술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장르에서도 공공성이 중요해져야 하기 때문에 공공예술로 넓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원한 단체들 중에 연극, 미용, 음악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공미술은 워낙 오랫동안 이론적, 실천적으로 쌓인 축적물이 많아서 훨씬 더 좋은 프로젝트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는 모르기 때문에 대충 해 오던 것을 ‘공공성’ 이라는 이름을 걸고 참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만약 불용 예산이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예술의 공공성을 전 장르로 넓히기 위해서 교육이나 워크숍 등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사실 이번에는 선별하고 씨 뿌리는 사업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굉장히 큰 변수가 문화부에서 900억 짜리 공공예술사업을 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박종관 위원장

- 이희경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건데요. 사실 2020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이 사업이 방점을 찍었을 텐데요.

○전효관 사무처장

- 워낙 대규모 사업이 펼쳐질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문화부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미 성과를 냈던 것을 발굴해서 하지 않는 한 단기간에 이런 것을 하기는 어렵죠. 저희는 사업기간이 2년이지만 문화부는 6개월입니다.

○이원재 위원

- 이 사업에 대해 최근에 밖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받았어요. 심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나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아직 안했습니다.

○이원재 위원

- 1차를 하고 나서 2차를 갈 때 보통 발표를 해 줘야 2차를 준비하잖아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2차 PT대상한테만 알려줬고요. 이것은 거의 일주일 정도의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2차 때 하려면 의결을 거쳐서 안내를 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문학창작기금을 제외하고는 1차와 2차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1차를 하고 나서 안내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원재 위원

- 그런데 4월 6일 접수를 시작했잖아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5월 8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이원재 위원

- 시작이 4월 6일이면 3개월이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3개월째 자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모르고 된 팀들만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 상식으로는 일반적인 지원사업 심의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것 일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생기냐 하면 “뭐가 있는 거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런 것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일반적 구조는 아니죠.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그런데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았기 때문예요. 저희가 1차 심의를 6월 초에 했거든요. 그리고 20일 정도 안내를 하고 2차 PT대상자들한테는 10일 정도 전에 안내를 했습니다. 아마 불만을 말씀하셨던 분은 1차에서 떨어져서.

○이원재 위원

- 5팀 정도 연락을 받았어요. “문제가 있는 거냐?”, “사업이 엮어진 것이냐?”

○전효관 사무처장

- 보통 1차를 하면 PT심사는 언제라는 공고가 나가잖아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그런 안내는 하는데요. 그분들이 발표를 저희한테 직접 듣지는 못하고 PT때 저희가 안 불렀으니까 떨어졌구나 하시면서 불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원재 위원

- 그러니까 저도 그 시스템을 여쭙보는 거죠. 왜 1차 선정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는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메일을 받았으면 PT를 하시는 거라고 하면 끝인 거잖아요. 메일을 받으신 분만 선정되신 거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희경 위원

- 잠깐만요. 작년에 공정심의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안내를 친절하게 한다.” 이것은 결정사항인 것 같은데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아르코창작기금 같은 경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범적으로 단계별로 발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고민을 했던 부분은 1차 발표까지 모두 발표하게 되면 의결건수가 2배가 됩니다. 의결을 받아야 하는 프로세스가 하나 있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위원회 의결절차를 안 해도.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 발표를 한 다음에 옴부즈맨이라는 창구를 열어놓고 있는데 심의 진행과정 옴부즈맨에 같이 들어오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희경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결과는 친절하게 안내를 하자고 했는데요.

○전효관 사무처장

- 제가 듣기로는 1차 발표를 했더니 실망한 분들이 많았다고 하던데요.

○박종관 위원장

- “지금 결과가 나왔으니까 홈페이지에 가서 결과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안내가 나갑니다. 그러면 됐으니까 연락이 왔겠지 하고 들어가 보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만일 틀리게 되면 거의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지원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는데 만약 오류가 있으면 이것은 정말 큰일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과감하게 못한다는 것인데요.

○유은선 위원

- 지금은 접수가 되면 바로 접수가 되었다고 문자를 보내주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미 끝난 것인데 아직도 쓰여 있어요. 그냥 ‘진행 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저희가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지만 택배를 보면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1차 종료’라는 것을 반영해 줘야 그 분들은 개인적으로 내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진희 위원

- 보통 이렇게도 하죠. 뭔가 안내하는 과정 안에서의 어려움이라면 “2차 PT대상자는 7월 1일 발표합니다. 선정자에 한해서 발표를 한다.”라고 지원을 할 때 안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박종관 위원장

- 내년도 정기공모 때 적용하려고 하면 올해 10월 이전까지 원칙이 정해져야겠지요.

○이원재 위원

- 죄송한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는 우리가 필요 없는 욕을 먹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냥 발표하면 되는 것을 블라인드 해 버리는 겁니다. 공모한 사람

이 100팀이 있었다고 하면 100팀 중에서 2~3팀을 뽑는데 97팀한테 블라인딩 되니까 필요 없는 의혹과 욕을 먹는 구조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업 규모를 보시면 어떤 사업은 10억입니다. 예를 들어 석 달 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업을 했다가 되면 하반기에 10억짜리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디테일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보통 접수를 하고 나서 결과발표까지 두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1차 심의에 떨어져서 2차 PT때 못 갔던 분들이 기분 나쁘다고 말씀하신 것은 직접적으로 안내를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떨어졌다는 말씀을 듣는 게 기분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개선을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저희가 그동안 1차와 2차를 동시에 발표하게 된 것은 1차와 2차를 발표하는 기간이 10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10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절차를 발표하기 위해서 의결을 받기가 빠듯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심의제도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디테일한 방안을 마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문제 제기를 해서 좋은 대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접수를 받겠습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의사봉 3타)

6. 기 타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이제 7기 소위원회 TF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73쪽부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정책혁신부의 정창호 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7기 위원회 소위원회 TF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구성 현황과 진행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의견을 나눠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상설소위원회 3개를 운영 중이고 의결된 것은 성평등 소위원회 1개가 있고요. 얼마 전에 1차 회의를 했습니다.

현장소통 소위원회와 정책혁신 소위원회는 7월 의결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현장소통 소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6기 위원회 때 했던 내용을 연장선상에서 가고 몇 가지 추가로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에 한정해서 얘기하면 생산적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부위원은 이시백 위원님, 유은선 위원님, 홍태림 위원님이 참여를 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소위원장님은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부는 2기 현장소통 소위원회 1인을 연임시키기로 해서 김대현 위원님을 연임시키고 7명은 외부공모 추천으로 7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책혁신 소위원회는 내부위원님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부위원 구성도 저희가 7월 3일에 비공개로 정책 아젠다를 놓고 논의를 하자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고요. 워크숍 진행 후에 저희가 풀 구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같이 필요한 분들을 모셔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7월 중에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TF는 3개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3가지 TF는 정책혁신 소위원회 준비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코로나19 대응TF에서 코로나 긴급지원에 대한 검토와 지원방향 수립 그리고 7기 위원회 입장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속도전이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빨리 결정해서 일정을 발표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경주 위원님, 유은선 위원님, 이원재 위원님, 정류란 위원님께서 사전검토를 통해서 논의의 테이블을 만들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불임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구조개선TF는 정책혁신 소위원회를 준비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저희 기획조정부에서 준비한 안을 가안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이주민지원 예술가를 위한 이주민지원 정책개발TF인데요. 제도 개선 부분과 비자제도, 다양성 지원사업 확대 등 박경주 위원님께서 TF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회의로 이런 분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만나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께 공유가 되었습니다.

고려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TF구성이 상당히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세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확한 미션을 갖고 일을 하고 해체하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구성 절차를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의결절차를 정확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다들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구성되면 사무처에서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합니다. 물론 정책혁신분에서 상설 소위원회 3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TF가 많이 만들어지면 TF의 업무특성상 맞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담부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F가 만들어졌을 때, 사실 3개 TF도 정책혁신 소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요. “기존 상설 소위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TF에서 논의된 것이 많으면 바로 위원회로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정책혁신 소위원회의 과정에서 한번 정리해서 올라올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팅되는 과정이고 저희 소위원회 운영구조와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마련되면 거기에 맞춰서 규정 개정을 하겠습니다.

붙임자료를 보면 현장소통 소위원회 구성 기본계획(안)은 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요. 홍태림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인데요. 보셔야 할 부분이 74페이지 하단에 현장소통소위를 담당할 예술위 위원 외의 위원도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현장소통 소위에 언제든지 참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3인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님 같은 경우 여기 위원님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서 의사진행 과정에 참여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75페이지의 민간위원 모집일정입니다.

이것은 가안인데 이 정도로 7월에 세팅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집인원은 7인 내외입니다.

그리고 구성에서 한 가지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박경주 위원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민간위원을 7인 내외로 모실 때 다양성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집방식 같은 경우 선정방식에서 외부위원을 모실 때 크게 2가지 심사를 하는데요. 1차 서류심사에는 가능한 7기 모든 위원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심사는 현장소통 소위의 위원으로 계신 3인은 꼭 오셔서 하시되 이것을 다 보시는 것도 이상할 것 같고요. 가능하면 모든 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위원으로 하실지? 아니면 일부 위원님이 하실 지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고려사항 중에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민간위원 선정 사후 재임기간 중 예술위원회 지원사업 2건 이상 수혜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셔서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원사업에 대한 건수를 이 정도로 제한하는 게 맞는지도 논의해 주시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소위원회 운영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2의 사업구조 개선 TF 운영 계획(안)은 기획조정부에서 작성한 것인데요. 제가 그냥 한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생략하고요. 지금 현재 위원 7명 그리고 사무처 11명으로 총 18명으로 초안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분과 운영을 통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구조가 되겠는데 문학, 시각, 공연, 다원예술 분과 운영입니다.

78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문학, 시각, 공연, 다원 쪽의 위원님들과 실무자들 그리고 현장 전문가는 아직 비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파트너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력이나 국

제부분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구조, 이런 의견들이 모아졌을 때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일정 그리고 이 과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나누신 것 같고요. 12월 말을 목표로 2021년 사업에 필요한 구조 개선을 하고 있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붙임3으로 넘어가면 코로나19 대응TF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건드린 것은 없고 정유란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내용과 박경주 위원님이 보내주신 내용을 그대로 실었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유란 위원

- 코로나19 대응TF 관련해서는 워크숍 때 필요성에 말씀이 나왔고요. 정책혁신 소위원회를 준비모임 때 이야기가 나와서 그 당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과 말씀을 나눴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일단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사안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어느 지점까지 저희가 건드릴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데요. 전체적으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코로나19 대응TF 관련해서 사안이 긴급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를 받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내부에서 4명의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오늘 나누고 준비해서 추진을 할 텐데요. 배경이나 목적, 목표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무처에 여쭙보고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토사항을 보시면 기존에 시행된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을 저희가 검토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주로 집중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예정으로 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제가 연극·뮤지컬 분야니까 말씀드리면, 아까 관람료지원사업과 같은 맥락인데 공공과 민간이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혼선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침을 어딘가에서는 정리를 해 줘야 한다는 문제 그리고 예술인 재난보험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논의를 해서 빨리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제의를 드리면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효관 사무처장

- 끝까지 듣고 논의를 하시죠.

○박경주 위원

- 저는 이주민예술가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전략TF를 계획 중에 있고요. 비용문제도 굉장히 크고요. 만약 전략TF가 너무 늦어지거나 거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이 너무

광범위하면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준비위원회처럼 사전에 2차 간담회를 하고 3차는 제가 이미 통화는 했는데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이주민예술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사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작업으로 하는 것은 내용을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와 2차, 3차 간담회가 있는데요. 1차 간담회는 예술인 비자가 E6-1과 E6-2인데요. 현재까지 E6-2는 문제점이 많아서 연구가 잘 되어 있는데 정책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있고요. E6-1 같은 경우도 예술가 비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연구 자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에 연구하셨던 전문가분들을 제가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E6비자 관련해서 가장 많이 연구하신 분들이고 국가인권위나 인권변호사 협회에서 하셨던 분들만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모두 나중에 TF에 참여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가장 긴박한 의제를 선정해서 확실하게 목표설정을 하지 않으면 늦어질 수 있어서 그런 과정을 갖고 이 분들 중에 일부분만 TF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2차 간담회는 한국에서 예술을 전공했거나 10년 이상의 예술활동 경력을 가진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분야별로 모셨습니다.

86페이지를 보시면 분야도 모두 다르게 하고 비자종류를 일부러 넣었습니다.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비자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이 가능한 것은 이 중에 몇 가지 비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비자로 인해서 다양한 국가에서 오신 분들로 섭외를 해서 이 분들과 화상으로 사전인터뷰를 진행하고 있고요. 간담회 때는 이 분들이 모두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1차 간담회는 날짜가 잡혔는데 2차 간담회는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2차 간담회 때 저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자격을 다루는 분과 문화부에서 관련된 분과는 통화를 했고요. 그래서 지원자격과 관련된 것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모셔놓고 이 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간담회를 풀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통화를 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서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부분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 작품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부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간담회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간담회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로 보고를 해야 할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일단 7월 7일 1차 간담회 건물은 제가 장소를 잡고 지원을 해 드립니다. 아직 전담부서까지는 나가지 않은 상태고 준비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 그리고 정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무처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바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먼저 부장님이 보고하면서 이야기 했던 TF문제와 소위원회 문제는 구분을 좀 하죠. TF라고 하면 위원장이 결재를 해서 구성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원칙은 있습니다. 예컨대 사무처직원들이 대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TF를 만들구요. 외부위원들을 모신다고 하면 한시적 소위원회가 더 가까운데요. 그것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설소위원회 3개와 TF를 만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운영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TF같은 경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논의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대응TF는 정책혁신 소위원회에서 나와서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사업구조개선 TF는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가이드를 들어봤을 때 사무처 내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업구조개선TF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구조개선TF가 정책혁신 소위원회 활동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민예술가 지원 정책 개발 전략TF는 박경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겁니다.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입장에서 보면 TF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런 식으로 하자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임들이 단발적으로 있을 때 위원회 활동과 소위원회 활동, TF활동은 모두 같은 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알겠습니다.

○유은선 위원

- 사실 이주민예술가 지원TF가 공식적으로 보고안건으로 올라올지는 몰랐는데요. 그냥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관심사에 대해서 올리면 되는 구조인가요?

○조기숙 위원

- 논의를 해야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정리한 부분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TF는 논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의를 다시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영전략본부장이 지적한 대로 사업구조개선TF가 정책혁신 소위원회와 어떤 관계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성 원칙을 확인하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주민지원 정책개발TF는 TF를 구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

시죠.

○전효관 사무처장

- 제 생각에는 정창호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소위원회와 TF는 각각 위상이 다르더라고요. 말하자면 아까 쟁점으로 써놓으신 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TF는 가볍고 유연하게 만들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TF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무처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TF가 있을 것이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성한 TF도 있을 텐데요. 소위의 구성 절차와 방식을 준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조금씩 다른데요. 대략을 종합해 보면 소위원회는 지속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단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TF는 작업팀을 구성해서 작업 결과물을 낸다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면 소위원회는 지속적인 현장과의 관계나 정책 아젠다를 다룬다고 생각하고 소위의 절차를 준용하되 TF는 꼭 소위의 절차를 준용하지는 않겠고요. 그 얘기는 말하자면 정책관련된 것은 정책 소위에서 필요성을 얘기하고요. 현장의 긴급한 의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현장 소위에서 논의하는 식으로 해서 단기간에 구축하는 게 있고요. 사업개선TF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작업을 끝내야 장르별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를 만들어야 내년도에 가능하니까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전략적인 TF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벨과 수준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 주시면 나머지 논의는 그것에 준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

-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소위 관련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현장소통 소위에 대한 안을 논의하는 겁니다. 일을 빨리 시작하게 해 드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대응TF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면 7월 3일날 정책 소위 워크숍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다 같이 논의를 한 다음에 논의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종관 위원장

- 한번 정도 늦춰 가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게 더 좋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사무처장이 얘기한 부분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희경 위원

- 예,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업구조개선 TF 같은 경우 7기 위원회의 주요 미션입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저는 음악이 아니라 전체 사업구조가 잡혀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모든 장르에 가능할 것인가?” 오신지 얼마 되지 않은 위원님들이 바로 들어가서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도 나주에 내려가서 미팅하기로 했거든요. 일단 먼저 시작 할 것은 시작을 하고 그것을 봐서 다른 장르가 움직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저도 이회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르별로 같은 보폭을 취할 수 있느냐? 사실 장르마다 기조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사무처에서 이것과 관련한 기초자료를 보니까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어떤 사안이 급박한 것인가를 사무처가 예견해서 보완한 것입니다.

○이원재 위원

- 그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데요. 사실 장르별 지원사업개선은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게 아니라 아코에 필요한 게 장르별 개선사업이 아니라 전체사업구조 TF의 이름을 걸려면 더 큰 사업 구조를 논의한 다음에..... 그런데 후자의 개선 방향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고 위원님들도 참여하면 낫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장르구조를 넘어서는 TF논의를 하고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인 것이죠.

○박종관 위원장

- 저희가 23개 아코혁신안에 근거한다면 상당부분 사전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논의를 해 보시고요. 이것을 사업구조개선TF라고 한다면 단순히 장르별 지원사업의 구조변경이 아닌 전체적인 사업으로, 이를테면 기금운용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문예진흥기금의 위상의 문제점을 다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문제는 정책혁신 소위가 감당해야 할 부분도 있고 사업구조개선TF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섞여 있어요.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인가?

○전효관 사무처장

- 우리가 큰 라인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지원방법이 들어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다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투트랙처럼 정책혁신 소위에서는 우리 사업의 전반적인 틀과 패러다임의 재설계 등을 얘기하고 지원심의TF는 장르지원 등을 해서 현장에서 왜 체감되지 않고 반응이 나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작업하고 나중에 총괄하는 방법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원재 위원

- 저는 동의하는데요.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완결적으로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장르별 지원이 시급하고 중요할 테니까요. 저는 투트랙 중에서 사업운영방식이나 지원심의제도개선에 걸리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7월 3일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한번 더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현장소통 소위원회와 관련해서 논의를 합시다.
무엇을 결정하면 되나요? 위원장을 결정하고 지금 있는 구성안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죠?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소위원장장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제 생각에는 현장위원들까지 뽑은 다음에.

○박종관 위원장

-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현장소통 소위원회 위원장을 뽑아야 소위원장이 절차를 책임지고 진행할 것 아닙니까?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현장소통 소위원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의견을 취합해서 의견을 듣는 위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내부위원이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러면 개인 의견인데요. 현장소통 소위원회는 공동위원장 체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새로운 안 인데요. 공동위원장이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이원재 위원

- 공동위원장도 좋은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내부 위원장은 정하고 공모 이후에 공동위원장을 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구체적인 안을 올리도록 소위원회 위원장을 정해 주시는 게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부위원 중에 소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선 위원

- 이시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시백 위원

- 저는 혼란스러운데요. 지난번에 위원회는 위원회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의결을 거친다고 알고 있는데요. 내부 구성까지 여기에서 논의가 되는 게 맞나요? 제 생각으로는 우선 위원장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포함해서 전체 위원이 구성된 후에 거기에서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은선 위원

- 결론적으로 내부와 외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내부를 이시백 위원님으로 추천하는 겁니다.

○이시백 위원

- 그 안은 결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안으로 나왔는데요. 제 의견은 내부와 외부를 공동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공모를 끝내고 위원이 구성된 후에 그 안에서 논의를 거치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공고를 내려고요?

○이시백 위원

- 그것은 아르크 이름으로 내는 게 낫지 않나요?

○박종관 위원장

- 지난번에 소위원회 구성 때는 소위원장 이름으로 공고를 하지 않았나요?

○전효관 사무처장

- 이런 절차는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이것을 빨리 구성하려면 제가 위원님들께 매번 여쭙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혼란스러운 부분은 원래 저희 규정상으로는 위원장님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재 위원

- 제 생각에 이시백 위원님의 뜻이 좋은데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외부위원들을 뽑아서 모였는데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모두를 존중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시백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준비과정이나 위원회가 열렸을 때도 내부위

원으로 위원장을 하시고요. 외부위원들 중에 뽑는 것이 안정적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은 역할이므로 위원님들 중에 적합분이 하시면 된다고 생각 하고요. 1년 이후에는 또 다른 위원님이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시백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소위에 관심과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것은 연임으로 앞에서 많은 애를 쓰고 경험이 있으신 분이 맡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추천권한이 있다면 홍태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규정에는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홍태림 위원

- 사실 위원 3인이 들어가니까 누가 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위원장 얘기도 나왔습시다만 빨리 해야 하니까요. 일단 저희 3명 중에 한 명이 했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무엇보다도 현장소통소위원회는 소위원회 구성을 빨리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거든요. 소위원회 선임 절차를 진행해보신 홍태림 위원님이 소위원장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강윤주 위원

- 홍 위원님이 그냥 하시죠.

○홍태림 위원

- 그러면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현장소통 소위원회 이 안건대로 하면 될까요?

○이시백 위원

- 그런데 75쪽에 논의가 필요한 사항 2개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한국 한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고요. 맨 밑에 2차 심사방식이 있습니다.

○이원재 위원

- 저도 단독방에서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아서 그랬는데요. 문화다양성 관점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어떤 위원도 장르 간 정체성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위원회가 나뉘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치는 지향하되 차별 없이 뽑는다.

○박경주 위원

- 그런데 제가 그것을 제안했을 때는 그 얘기가 아니라 신청자격에 한국인으로 되어 있

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만 변경을 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어떠냐는 의견이었습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사업공모를 할 때 대한민국 국적을 보는 것은 있는데 소위원회 구성에서는 없습니다.

○이시백 위원

- 박경주 위원님 말씀은 제한되지 않았더라도 공개적으로 공모할 때 적시가 되어야 인식하고 응모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죠.

○이희경 위원

- 그런데 적시를 할 경우에는 뽑겠다는 의미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오래 논의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홍태림 위원

- 저희가 모집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별, 성별까지만 되어 있는데요. 국적까지 얘기하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라고 되어 있는데 ‘고려’라는 말은 빼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민간위원의 해당 분야 및 지역, 성별, 세대를 고려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홍태림 위원

- ‘고려’라는 말은 빼고요. 성별, 세대, 국적 상관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국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문화다양성’으로 하실 건가요?

○박경주 위원

- 국적이라고 하면 이주민에 한정이 되고요. 문화다양성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정체성이다 해당되는 것이죠.

○박종관 위원장

- 문화다양성으로 하시죠. 그러면 거기에 모두 담길 수가 있으니까요. 이른바 장애인 문제도 들어갈 수 있고 소수자 문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폭이 넓어질 겁니다.

○박경주 위원

- 그것은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갈게요.

○박종관 위원장

- 그렇게 문구를 수정해서 현장소통 소위를 빨리 구성하는 쪽으로 하시죠. 그리고 최대한 부장이 협조하여 행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76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려사항’은 외부에 나갈 때 들어가는 말입니다. 3가지가 있는데 민간위원 재임기간 중 2건 이상 수혜 불가라는 것이 나가야 하고요. 임기는 1년을 전제로 했습니다.

○박경주 위원

-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회의를 할 때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연임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임기를 맞추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수나 수혜불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진희 위원

-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고 하고 맞추는 것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전효관 사무처장

- 사실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거의 준하는 위상을.

○박종관 위원장

- 소위원회는 권한이 높고 법적장치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런 맥락에서 소위원회 위원이 지원사업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현실로는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위원회를 운영하는 구조에서 보면 이런 제한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은 좀.

○박종관 위원장

- 기본적인 관례가 있잖아요? 1개씩은 허용하기로 했잖아요?

○전효관 사무처장

- 말하자면 위원들 같은 경우 허용을 안 하는데요. 소위원회 같은 경우 1개는 허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소위원회를 하다가 1번은 허용해야 들어올 수가 있지 지원사업에 신청도 하지 말아야 한다면 누가 소위원회에 들어오겠습니까?

○이희경 위원

- 지금 2건 이상 수혜불가는 현재의 안인가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2건 이상 수혜불가는, 사실 저희 규정상에는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그런데 현장소통 소위원회를 김기봉 위원님이 운영하면서 소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1건으로 하니까 정말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2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했죠.

○이희경 위원

- 2건 이상은 1번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현장소통 소위원회를 이끌었던 김기봉 위원님은 그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2개는 돼야 누가 들어오지.” 그런데 그렇게 결정 하지를 못 했죠.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현장소통 소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님이 여러 건을 받은 게 있어서 논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원재 위원

- 이 조항은 그대로 두면 되는 것 아닌가요?

○박종관 위원장

- 소위원회 활동은 연말에 국회에 보고를 합니다.

○이시백 위원

- 이것은 현장소통 소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박종관 위원장

- 모든 소위에 적용이 됩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소위원회는 내부추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적 등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사안

은 외부공모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이주민지원 정책개발TF 구성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시면 됩니다.

○박경주 위원

-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TF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정책혁신 소위를 할 때 계속해서 이쪽과 관련된 문화다양성TF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번 정책혁신 소위 때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써오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TF를 무조건 만드는 것보다 간담회를 먼저 해서 의제 도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런 근거에서 준비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이 얘기가 어쨌거나 7월 3일 정책혁신 준비모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거든요. 그 때 얘기를 하고 그 안건을 올려서 토론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이것도 논의가 된 것이네요. 이주민 지원정책 TF는 소위원회 구성이나 TF로 대응하기보다는 연석회의 같은 장치로 급하게 대응하여 결론을 빨리 도출하는 형태로 대응하여도 충분히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포함하여 7월 3일에 부족한 부분은 논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주 위원

- 7월 3일은 정책 소위만 모이는 건가요?

○이희경 위원

- 오셔도 됩니다.

○이원재 위원

- 전달이 안 되었나요? 원하시는 위원님들은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회의를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1~2가지를 꼭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술계의 Y 성폭력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단독방에서 논의가 된 바가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한 것은 6월 19일 기사가 나오면서 인지를 했습니다.

○이원재 위원

- 죄송한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좀 헛갈리느냐 하면 정책 소위 위원 구성이 있잖아요? 저희가 모였을 때 워크숍 공지는 다 했고요. 참여하실 분은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아젠다 설정과 위원 추천은 6월 말까지 해 달라고 했고요.

○박경주 위원

- 이미 구성이 된 것 아니었나요?

○이원재 위원

- 아니죠. 우리 위원들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소위 위원 구성을 위원들과 사무처에서도 추천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결정을 풀을 놓고 여기에서 토론하나요?

○이희경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올려야 하는 겁니다.

○이원재 위원

- 그러면 성안을 해서 제안을 드리면 되는 것이죠?

○이희경 위원

- 예.

○박경주 위원

- 그러면 정책위 위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정책 소위원회 준비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회의에 참여하실 명단을 여기에 안 넣은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술계 성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임기간은 1년으로 바꾸겠습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진행되는 과정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홍태림 위원

-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르코아카이브의 Y작가와 관련된 자료도 있고 Y작가 이전에도 아르코 아카이브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작가 중에 성평등이나 성폭력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의 자료를 빼지 않으면 내 자료도 빼겠다는 식으로 민원을 넣은 분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넣은 분께 여러 가지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그 작가의 작업을 공식자료로 밖에 놓지 않겠다거나 어쨌든 그 분한테 어떤 반응을 했다는 얘기는 해야 하는데요.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여러 가지 문제가 문예위에 와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한 것이 뭐냐?” 라고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체크할 것이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위를 구성하게 될 때 현장소통 소위원회는 공모를 하게 되는데요. 고민이 되는 게 Y작가님이 6기 때 정책 소위에 민간위원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될 때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명시해놔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받는 가이드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주 위원

- 그 부분에 관해서 공정심의부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검색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해서 내는 서류가 있거든요. 그냥 그것을 받으면서 접수하는 걸로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보내 드리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으시네요.

○박종관 위원장

- 주신 의견을 내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박경주 위원

- 그리고 심의위원을 정지하는 것도 제가 미리 정 부장님께 말씀드렸고요. “일단 터질 것 같으니 정지를 시켜놓으면 어떠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보니까 말씀하신 정책 소위에 참여한 것이 있었고요.

○이원재 위원

- 논의 제안을 하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와 틀리면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행정이나 제도상으로 아르코와 Y작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제도적으로 Y작가가 처벌을 당했거나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문제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라는 부분에서 적극적인 자세와.....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 그 문제를 논의를 할 겁니다. 프로세스 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의지를 밝혀야 하고요. 이것은 결정사항은 아닌데요. 서울문화재단 이사회는 오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거기에서 아르코 등에 제안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닌 문화예술 성폭력 문제와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와 문제해결의 의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합의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게 왜 민감한 문제냐 하면, 예를 들어 가해자와의 소송 건부터 고려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원회가 책임진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논의가 가능한 것이죠.

○전효관 사무처장

- 정확한 논점을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박경주 위원님 얘기는 심의위원은 범죄 경력 조회

를 내자는 것이죠.

○이원재 위원

- 지난번에 논의가 끝난 것이고요.

○박경주 위원

- 저희가 지난번에 논의를 했었잖아요.

○이원재 위원

- 그런데 자꾸 헛갈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Y작가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박경주 위원

- 그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얘기였어요.

○이원재 위원

- 그것은 지난번에 끝난 얘기고 아카이브 삭제라든지, 이것은 Y작가와 관련된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홍태림 위원

- 그것은 무죄추정의 법칙이 있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될 때까지는 보류로 두자는 거죠.

○이원재 위원

- 무죄추정의 원칙은 보류를 못 하는 겁니다. 그대로 뒤야하는 것이죠.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해자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가해자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행정 기관이 기존에 법제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 하자는 게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죠.

○박경주 위원

- 그런데 저는 회의 때마다 앞의 것을 하다보면 진짜 논의가 필요한 것은 하지 못하는데
요.

○박종관 위원장

- 그것도 논의를 할 겁니다.

○이진희 위원

- 예, 나중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Y작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예술위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했을 때 예방적 조치와 사후적 조치로 나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예방적 조치와 관련된 부분은 성범죄 이력조치를 심의위원들한테 하자는 제안이 지난번에 있었고요.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소위에 대해서 공고를 낼 테니까 소위를 구성하는 위원들한테도 그것을 적용할 것인지를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이력조회는 사법적 조치를 거쳐서 한 것이 아니니까 완벽하게 되지는 않으나 예방적 조치로써 우리가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카이브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토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이냐? 아예 삭제할 것이냐? 아니면 그 작품을 두되 그 사람이 가해자라는 코멘트를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협의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합의하는 선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성평등 소위만의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원사업에 관련된 것이나 소위 운영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작가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식의 대책들을 마련할 것인지는 오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을 만들어 와서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논의에 앞서서 박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폭력 조회는 저희들이 제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을 것인데요. 저희들은 범죄경력조회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려면 청소년에 대한 취업제한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예술극장과 미술관을 가지고 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경력조회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고요.

○전효관 사무처장

- 간단하게 말하면 성범죄 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규정되어 있어요.

○박경주 위원

- 저희가 조회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제출을 하는 것이죠.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그것도 안 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먼저 절차적인 것에 대해 법적인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이시백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는 논의가 시급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나 하면 Y작가와 같은 경우도 또 발생할 것에 대한, 당장 우리는 현장 소위에 공모를 해야 합니다. 그 공모에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질문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안을 드리면,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는 나중에 성평등 소위 등에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고 당장 저희 소위 때 공지해야 될 절차가 있는데요.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홈페이지에 내정자를 올려서 검증하는 밖에 없고요. 사전에 공모에 응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정도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오늘 논의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초안을 만들어서 논의를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지금 대책위원회에서는 홍태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것인 것 같은데요. 미술관에 프로필 작가에 등록되어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위원회 조치사항이나 방침을 질의서처럼 보내왔더라고요. 저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게 한 작업을 없애야 하는 거냐?”, 아니면 “폐기를 할 것이냐?” 다음에 논의하자는 것보다는..... 아까 예방적 조치에 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예전에 인권보호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미 되어 있는 게 꽤 많아요.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방조치로 서로를 분리시킨다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만나서 안을 만들어보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제가 미술관장 직무대행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홍태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Y작가는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민원을 얘기했던 분은 정확하게 성명 등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정되지 않은 분으로는 못 한다는 것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그 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추정을 한 다음에 변호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술관 2층에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으면서 작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합니다. 돈을 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발표된 부분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미 발표된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 문제나 혹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법적으로 따지면 그 분이 원한다고 해서 예술위원회가 꼭 들어줘야 할 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친일을 했다고 할 때 남겨두듯이 사실을 적시하여 함께 남겨두는 것은 물론이지만 다 없앤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원재 위원

- 그런데 사실 서울문화재단이 행정적인 잘못을 한 것은 없습니다. 법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했더니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제도라는 겁니다. 아르코였다면 똑같이 처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제도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내부 지침 같은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면 인권담당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서 이미 만들어진 제도들을 위원회에 이식하거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진희 위원이 말씀하신 예방적 조치와 사후 조치로 나누는 일상적인 것들을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오늘

원칙으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이상의 논의가 있지 않으면 일단 여기까지를 내용으로 실무에서 준비하여 7월에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6월 22일 ○○일보에 국회 예산조정 및 증액사업과 관련된 보도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으로서는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위원회의 의견을 구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왔으니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재 위원

- 논의 제안을 드리면 위원회 독립성 문제 같은 거잖아요?

○박종관 위원장

-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원재 위원

- 오늘 더 논의해도 뭔가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논의하는 건과 같이 하면 어떨까요?

○전효관 사무처장

- 아까 얘기한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의 프로세스 문제는 행정과의 관계라고 하면 쪽지예산은 의회의.

○이원재 위원

- 그러니까 2개를 놓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러니까 의회는 심의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공공기관 자체가 주체가 되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위원들이 논의를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원재 위원

- 그러니까 아까 그 건과 같이 하자는 것이죠.

○박종관 위원장

- 위원회의 자율권과 관련하여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가진 국회, 예산편성권을 가진 행정을 상대로 위원회의 자율권과 독립성 부분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 차원의 대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는 논의하기 어려우니 위원회에서 직접 논의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네 시간씩 회의를 해도 계속해서 중요한 논의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렇게 소모적인 회의를 한 달에 한번 씩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어떻게 할까요? 도저히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 간담회를 격주로 잡든지 할까요?

○강윤주 위원

- 화상회의를 제안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단톡방은 효과적인 논의가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유은선 위원

- 사실 어려워도 논의는 만나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화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희경 위원

- 해 보니까 한계가 없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적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번씩 만나고 중간에 시급한 사안들은 화상으로 그때그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완벽한 형태의 회의구조의 화상회의는 못했지만, 이렇게 소모적이거나 어려운 일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2년 동안 계속해서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간담회 등은 화상회의를 통해서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방법과 제도를 빨리 찾겠습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7월 회의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통 저희가 마지막 금요일에 하는데요. 지금 준정부 기관들에게 내려온 지침이 올해 휴가를 빨리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일 금요일에 하시면 어떨까요?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이견이 없으면 그렇게 결정하고 24일 금요일에 차기 회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태림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2시에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2시에 하는 것에 이견이 없으시면 2시에 하시죠.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24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회의가 이렇게 길어진 것은 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위원장의 책임입니다. 이상으로 제 281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 15분 회의종료)

